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경제회복의 출발점”

문 대통령,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555조8000억 규모 편성된 예산안, 경제회복에 최우선”

일자리 창출 · 한국판 뉴딜 · 미래성장동력에도 역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부터 적극적인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 등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방역과 경제의 주체로 애쓰고 계신 국민들께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55조8000억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했다.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 회복의 출발점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며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 중심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놓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명의 일자리를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개를 창출하겠다”며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해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고 투자와 수출이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며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부 정책에 대해선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 상권에 대한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 추진과 관련 문 대통령은 “어려울 때일 수록 미래를 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하여,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교육, 의료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에는 8조원을 투자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000억원을 투자한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그린·안전망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여,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며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함께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000억원을 투자하겠다.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5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일본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상황은 올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에 이차보전금 지원.확대의 시급함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 후에도 내년에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며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하여,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목표로 뛰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사업을 비롯한 국가성장 전략의 뒷받침이 되는 고용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

국민 10명 중 7명 “공감”

자치분권위 조사 결과… 지자체 코로나19 방역 기여도, 80.1%가 인정

제8회 지방자치의 날(2020년 10월 29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다수(80.1%)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전국 성인(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등 자치분권 관련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자치분권 관련 국민 여론조사는 ㈜케이스탯리서치가 지난 19~22일 유·무선 RDD 전화 조사를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이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여론조사와 관련, “지역 주민들의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 의장은 이와함께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지방행정에 대한 신뢰와 자치분권에 대한 중요성이 재확인된만큼, 지역주민이 지방자치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4%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4.8%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응답은 80.1%로, 다수의 국민들이 이번 코로나19대응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했으며, 자치분권의 강화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행정추진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62.4%가 적절했다고 응답했으며, 재정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4.4%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21.5%) 보다 높았다.

현재 보다 주민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83.6%로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이는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등 법제화를 통한 주민 직접참여제도의 확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무배분 원칙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3.8%로 높게 나타났다.

사무배분은 ‘보충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해야 한다.

주민의 요구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법률에 의해 제한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강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76.9%로 반대한다는응답(17.9%) 보다 우세했다.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2.9%가 찬성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하고 있는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것에는 55.9%의 응답자가 찬성했다.

지방의회의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 등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에 찬성하는 의견은 78.1%로 지역특성에 따른 주민의 요구증가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조직 운용의 자율성 강화에 응답자의 다수가 동의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주장에 대해 70.2%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유호상 기자

“전북신보 통한 이차보전금 확대 · 지원을”

두세훈 도의원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이차보전금을 확대.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세훈 의원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시중은행 대출금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4,000억 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 동안 약 8,000억으로 2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지역경제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상황은 올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에 이차보전금 지원.확대의 시급함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 후에도 내년에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포스트코로나시대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에 두 의원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내년 부득이하게 편성되지 못할 각종 행사 예산을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으로 대체해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대출금 변제기 상환기한을 연장해줌으로써 도가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돼야 한다”며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두 의원은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코로나19 글로벌 위기 속에 도내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 발전 유공자 표창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가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협의회는 28일 전주시의회에서 ‘전북 지방자치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갖고 전북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로서 김종상씨(전주동양비니루 대표)와 전주시 의회사무국 안성효 주무관을 선정했다.

김종상 대표와 안성효 주무관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방자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전라북도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윤상 기자

KT&G 사장 국감 증언대 위증 ‘도마 위’

백복인 사장 “장점마을 관련 감사원, 검찰 조사 불법 없다 판명” 발언

감사원 “KT&G, 감사대상 아냐” · 검찰도 자료 요청 등 사실조회 그쳐

KT&G 백복인 사장이 국정감사 증언대에서 위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국회 차원에서 고발조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실에 따르면 백 사장은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불법·위법 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에서 감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장점마을과 관련해 KT&G는 감사대상이 아니며, ㈜금강농산이 KT&G로부터 반입한 연도별 연초박 현황자료만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익산시로부터 고발된 (주)금강농산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KT&G 측에 관련 계약서 등에 대한 자료요청 등 사실조회를 진행했을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KT&G는 직접적인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 없으나 백 사장은 마치 감사원과 검찰에서 장점마을 참사와 관련해 무죄로 판단을 받은 것처럼 위증했다는 지적이다.

만약 감사원과 검찰이 KT&G 측에 불법·위법 사실이 없다고 판명했다는 백 사장의 진술이 거짓 증언으로 밝혀질 경우 ‘국회에서의 감정 증언 등에 대한 법률’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수흥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장철민 의원과 협의를 통해 백복인 사장의 위증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거짓말을 일삼는 것은 피해주민을 두 번 죽이고 익산시민과 국민 모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대중교통 편리 · 접근성 향상 정책 발굴

전주시의회 생태교통연구회, 대중교통 활성화 토론회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생태교통연구회(회장 김진옥 의원)가 28일 전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대중교통의 편리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서 대중교통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전주시의 자동차가 대중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고 시민불편을 초래,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시는 매년 평균 1만대씩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어 인구 66만 명에 31만여 대가 등록돼 차량 증가에 따른 정체현상 등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 박민수 연구위원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의 현재와 미래를 향한 국가계획 그리고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발제에 나섰고, 이어 한국교통안전공단 김민석 선임연구원이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국내 및 국외의 사례를 통해 두 번째 발제에 나섰다. 이어 김진옥 전주시의원, 엄성복 전주시 버스정책추진단장, 문지현 함께타는 버스시민연대 활동가 등이 전북대 장태연 교수의 진행으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무탄소 활성화, 기후변화 문제 등 생태교통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통행정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기업, 정치조직 등 전 사회적인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윤상 기자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 현장 점검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경진)가 28일 생활폐기물 적환장 신축 대상지, 구룡마을 대나무숲 정비사업 대상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 대상지, 청년식품창업 허브센터 건립 대상지를 찾아 시의 주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현안들을 꼼꼼히 챙기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